

## 1945-46년, 在朝鮮일본인의 귀환과 미군정의 대응

신재준\*

1. 머리말
2. 해방 전후 미국의 귀환문제 인식과 재조선일본인의 동향
  - 가. 미국의 귀환문제 검토
  - 나. 재조선일본인의 동향
3. 1945-46년 미군정의 재조선일본인 송환
  - 가. 미군 관할지역의 일본인 송환
  - 나. 38선을 넘어온 일본인 송환
4. 맺음말

### 1. 머리말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배함으로써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돌렸다. 귀환(Repatriation)<sup>1)</sup>은 이 시대적 분기점의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 Repatriation은 통상 歸還으로 번역된다. 자발적 이동이 아닌, 이동을 강제하는

가장 아래이자 앞에 있었던 현상이다. 해외 각지에서 종전을 맞은 수백만 명의 한인과 그보다 몇 배는 될 제 민족 난민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전역을 아우른 이 대규모 이동은 일본제국의 유산을 지우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전후처리의 일환이었다. 한국으로서는 36년에 걸친 피식민 통치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처럼 그 자체로 종전-해방을 상징하는 동시에 식민지기를 결산하고 현대사의 원형을 살핀다는 점에서 귀환문제는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sup>2)</sup> 우선 당대 기록에 가까운 森田芳夫와 Wagner의 저술은 사실관계와 자료 면에서 기본적인 참고문헌이다.<sup>3)</sup> 본격적인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이후 진행되었다. 최영호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 재일조선인과 재조선일본인의 귀환과정을 분석했고, 서울·부산 등 지역별 귀환양상도 아울러 다뤘다.<sup>4)</sup> 이연식 역시 여러 논문을 통해 귀환양상과 귀환자

---

주체가 있을 때는 送還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한편, 이에 관해 당시 일본에서는 주로 引揚げ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얼핏 같은 맥락이지만 황선익에 따르면 引揚げ는 해외의 일본인을 현지에서 구출하여 귀환시킨다는 적극적 의지가 내재된 용어로, 전후 해외 각지의 조선인과 일본인 앞에 놓인 귀환실정의 엄연한 차이를 상징하는 것이다. 황선익, 『연합군총사령부의 해외한인 귀환정책 연구』, 국민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4쪽. 본고에서는 원칙적으로 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문맥에 따라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미군정의 입장에서 송환이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 2) 장석홍은 귀환의 의미를 단순 이주가 아닌, 식민통치의 강제와 모순에서 비롯한 이주 및 강제동원으로 해외에 나갔던 한인이 해방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보면 귀환연구의 범주는 귀환과정 외에도 귀환의 전사로서 해외 이주 및 강제동원 문제, 미귀환 문제, 귀환 후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장석홍, 『귀환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해방 후 한인 귀환의 역사적 과제』 역사공간, 2012.
- 3) 森田芳夫, 『在日朝鮮人處遇の推移と現状』 法務研究報告書 43(3), 東京: 法務研修所, 1955; ———, 『朝鮮終戦の記録』 東京: 巖南堂, 1964.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1 (여기에서는 일본 외무성에서 번역한 『日本における朝鮮少数民族』 (東京: 外務省, 1951) 판을 활용). 단 모리타와 와그너는 모두 귀환업무에 직접 관여했던 당사자들로 논지에 자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황선익, 2012, 앞의 논문, 8-9쪽.

들의 경험, 귀환이 가져온 사회문제 등을 살폈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식민지배 집단의 이주와 지배, 퇴거라는 관점에서 재조선일본인의 귀환을 분석했다.<sup>5)</sup> 황선익은 미국의 대일정책과 전후처리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동아시아 귀환을 전반적으로 조율한 연합군총사령부(GHQ/SCAP)의 귀환정책을 분석했다.<sup>6)</sup> 국민대 한국학연구소가 펴낸 일련의 총서 또한 귀환연구의 양적·질적 확장을 가져온 중요한 성과이다.<sup>7)</sup>

본고는 해방 직후 재조선일본인의 귀환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즉 군정의 일본인 송환과정을 살펴보려는 글이다. 이제껏 재조선일본인의 귀환은 해외 한인의 그것에 비해 빛을 덜 받은 경향이 없지 않다.<sup>8)</sup> 어찌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연식이 지적했듯이

- 
- 4)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제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36, 2003(a); ———, 「해방직후 재경일본인의 일본귀환에 관한 연구」 『전농사론』 9, 2003(b); ———, 『일본인 세화회 : 식민지조선 일본인의 전후』 논형, 2013 등.
- 5) 이연식, 「해방직후 해외동포의 귀환과 미군정의 정책」 『전농사론』 5, 1999; ———, 「해방 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 『조선을 떠나며』 역사비평사, 2012 등.
- 6) 황선익, 2012, 앞의 논문.
- 7) 장석홍 외 공편, 「해방 전후 국제정세와 한인의 귀환」 역사공간, 2012; ———, 「해방 후 중국·대만지역 한인의 귀환」 역사공간, 2012; ———, 「해방 후 한인 귀환의 역사적 과제」 역사공간, 2012. 이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귀환문제에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최근에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 경향도 눈에 띈다. 귀환문제 연구사로는 이연식, 「해방 직후 조선인 귀환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한일민족문제연구』 6, 2004; 장석홍, 2012, 앞의 논문 등을 참고.
- 8) 물론 이는 상대적인 것일 뿐 재조선일본인 귀환연구도 그간 많이 축적되었다. 관련 연구로는 김경남, 「재조선 일본인들의 귀환과 전후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 2008; 노기영, 「해방 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 2006; 이연식, 「해방 후 일본인 송환문제를 둘러싼 남한사회와 미군정의 갈등」 『한일민족문제연구』 15, 2008; 정병욱, 「해방 직후 일본인 잔류자들」 『역사비평』 64, 2003; ———, 「조선총독부 관료의 일본귀환 후 활동과 한일교섭」 『역사문제연구』 14, 2005;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인 귀환」 『항도부산』 24, 2008; ———,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 2008 등을 참고.

이들은 귀환과정 및 그 이후를 통해 한국사회 그리고 한일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의 일부이다. 또 오간 사람들을 동시에 고찰할 때 당시 집단이동의 전체상을 복원할 수 있다.<sup>9)</sup>

본고는 우선 전시 미국의 정책구상과 해방 후 미 24군단-군정의 실제 송환과정을 일관되게 추적하고자 했다. 글의 중심이 될 뒷부분은 가급적 정책보다 실무지침에 가까운 군정의 업무 양상을 드러내려 했다. 더하여 일본인 귀환의 상황적 요인이 송환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초점을 두고자 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미군에 마땅한 지침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戰前 미국의 대한정책 구상 가운데는 일본인 귀환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대부분을 송환해야 할 것이라는 대강의 원칙만 확립한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안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24군단은 남한 군정을 지시 받았을 때와 비슷하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이는 정책 지침이 마주한 현실을 앞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둘째, 미군정의 위상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인 귀환은 동아시아 전체 귀환의 일부였고, 자연 미군정의 귀환업무는 기본적으로 연합군총사령부의 귀환정책을 집행하는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남한이라는 독립지역을 관할하는 미군정으로서의 자연 정책집행과정에서 나름의 입장을 가질 수 있었다. 연합군총사령부의 하위기관이자 독자적인 점령행정의 주체라는 군정의 위상 또한 송환업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주로 군정 자료에 의지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기 미 전구문서(RG 332 : U.S. Theaters of War, World War II, 1939-1948)<sup>10)</sup> 중 주한미군사령부 G-2 군사실 문서철(USAFIK, XXIV Corps,

9) 이연식, 「해방 직후 ‘우리 안의 난민·이주민 문제’에 관한 시론」 『역사문제연구』 35, 2016, 158-159쪽.

10) 동 레코드그룹은 RG 338(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G-2, Historical Section)에 수록된 문서들이다. 여기에는 미군정에서 귀환업무를 주관했던 외사과(Office of Foreign Affairs) 및 각 지방 전술부대들이 생산한 관련 문서들이 다수 있다. 학계에 알려진 이른바 「게인 보고서」도 여기 있다.<sup>11)</sup>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사』 1이다.<sup>12)</sup> 민간인 송환에 관한 8장(Repatriation of Japanese Civilians and other foreign nationals)을 참고했다.

## 2. 해방 전후 미국의 귀환문제 인식과 재조선일본인의 동향

### 가. 미국의 귀환문제 검토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미국은 곧바로 ‘전후기획’에 들어갔다.<sup>13)</sup> 국무부 산하 ‘전후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y)는 官界는 물론 재계·군

---

Organizations)과 함께 현재는 RG 554(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1945-1960)로 재분류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11) 「Repatriation - from 25 Sept. 1945 to 31 Dec. 1945」,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 (5 of 6). 외사과 소속 게인(William J. Gane) 중위가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일조선인 및 재조선일본인 송환업무를 골자를 정리한 약 100쪽 분량의 보고서이다. 앞의 森田芳夫 자료집에도 실려 있다.

12) 『주한미군사』 1, 돌베개, 1998. 주한미군사(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 HUSAFIK)는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 출간했다. 본고에서는 원문을 주로 하고, 번역본도 참고 활용했다.

13) 전시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해서는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부 1장(태평양전쟁기 미국의 대한구상과 점령정책의 준비)을 참고.

부·민간의 두뇌집단을 망라해 미국의 전쟁목표와 전후 세계질서 수립 방안부터 지역문제의 해결원칙이나 그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자문위원회’는 여러 번의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전후구상을 점차 구체화했다.

한국문제는 1942년 중반 이후부터 취급되었다. 이 과정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sup>14)</sup> 1단계는 1943년까지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연구단계이다. 한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취합하고 평가했으며 한국문제 해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검토했다. 2단계는 1944년까지 정책 대강이 만들어지는 단계, 3단계는 정책 결정단계이다. 삼부조정위원회(SWNCC) 산하 극동소위원회에서 연합국의 한국 점령방식, 점령 이후 군정 실시방법, 국제관리기구 구성을 위한 강대국간 협의 등이 논의되었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곳이었지만 이미 1942년경부터 신탁통치 구상이 검토되었다. 이는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 및 정치·경제·군사·지리 등 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대체적인 기본방향은 일본과 분리하는 것이었다. 즉, 한반도를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경제단위로 하여 전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이었다.<sup>15)</sup>

한반도와 일본의 분리가 일찍부터 정책 기초가 된 이상 양국에 재주하고 있던 상대국민의 처리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1945년 3월에는 군정 설치 시 한국인과 일본인의 활용방안, 재조선일본인의 귀환 등이 정책연구주제로 검토되었다.<sup>16)</sup> 6월에는 극동지역분과조정위원회(The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East Asia) 한국소위에서 재일조선인 및 재조선일본인의 귀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14) 정용욱, 2003, 앞의 책, 24-33쪽.

15) 정용욱, 2003, 위의 책, 48쪽.

16) 장석홍,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해외한인 귀환정책」 제48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5, 510-511쪽.

소위의 보고서<sup>17)</sup>에서 재조선일본인 귀환에 대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을 엿볼 수 있다.

보고서는 우선 일본인 집단의 규모 및 속성과 같은 일차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1941년 현재 재조선일본인 수는 약 72만 명이며 종전 시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들의 절반 가까운 41%가 식민 행정 관계자이며 그 외의 경우도 대부분 기업가·경영인·기술자 등 사회 상층부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어 보고서는 두 국민이 귀환을 희망할지 여부, 안보적 요소, 대규모 귀환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 등 관련된 여러 측면을 살폈다. 전자의 경우 한국인들은 종전 시 이들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가길 바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일본인들은 한일 양국의 경제사정과 그에 따른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 일본의 팽창주의 부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침투의 교두보가 될 일본인 수가 가능한 적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일시에 집단 귀환이 이뤄질 경우 일본경제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일조선인의 귀환이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 즉 일본인 집단의 일부만 또는 전부를 귀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일본인들이 잔류를 희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대부분을 귀환시켜야 할 것으

17) 보고서는「K-9 Preliminary a, 'Korea: Repatria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1945.6.1, RG 59, Records Relating to Miscellaneous Policy Committee, 1940-45. 이 자료는 조용욱, 「일본 내 한인의 귀환과 한국 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해방 직전 미국 측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33, 2005에 「한국 내 일본인의 송환에 관한 문건」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문서의 초안 성격으로 내용이 거의 같은 4월 27일자 문건은 RG 59,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and Under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1941-48, 1950에 들어 있다. 공동소위의 K시리즈 보고서는 이외에도 한인의 국제적 지위(K-1), 정치적 문제와 해외한인(K-3), 일본지역 한인의 귀환(K-7), 만주지역 한인 동향(K-12) 등이 있다. 황선익, 2012, 앞의 논문, 33쪽.

로 보았다. 한국인들의 감정이 모든 일본인들의 귀환을 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였다.<sup>18)</sup> 일본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안보적 요소도 중요했다.<sup>19)</sup>

다만 보고서는 수송·전력·통신 기타 주요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경영자 등은 한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 잔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과의 관계나 한국 사회경제에 대한 기여능력 등을 고려해 귀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뒤에서 보듯 이 두 가지 송환방침은 모두 종전 후 구체화해 미군정의 송환 업무에 적용되었다.

요컨대 해방 직전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인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규모나 속도, 방법과 같은 실행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 다수의 난민들은 미국의 관여 없이도 자발적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생각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상보다 일찍 전쟁이 끝남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점령의 세부적인 방침을 완성하지 못했다. 오키나와에 있던 미 육군 24군단은 급하게 군정을 지시받고, 9월 초순 남한에 진주했다. 남한의 점령통치와 민정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정책지침은 1945년 10월 13일 삼부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10월 17일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전달된 SWNCC 176/8(한국의 미군 점령지역 내 민간행정에 관해 미 육군 태평양지구사령관에게 주는 초기 기본지령)이었다.<sup>20)</sup> 전체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정치적·행정적 분리, 사회적·경제적·재정적 통제로부터 완전한 자유 획득, 자주독립국가의 재건 촉진 등을 제시했다.

18) 보고서는 역사적 경위에서 비롯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서로에 대한 반감, 즉 분노와 경멸의 감정을 잘 지적했다. ‘압제자’로서의 일본인이라는 한국인들의 대일감정은 다른 미국 자료들에서도 종종 언급된다. 예컨대 『주한미군사』1, 596쪽; 「게인 보고서」1쪽.

19)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연합군최고사령부의 귀환 프로그램에서 최우선 고려대상은 역시 일본이었다. 황선익, 2012, 앞의 책, 59-60쪽.

20) 정용욱, 2003, 앞의 책, 120-125쪽.



지령은 인적 분리에 대해 일본인을 전원 송환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 예외적으로 전문가와 기술자들은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잔류시킬 수 있었다. 또 일본인 귀환자와 재일조선인 귀환자의 이동을 조화시키고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고려해 필요 시 일본인을 격리·보호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한일간 모든 금융관계를 단절하고 외환거래를 통제하며, 일본인 공사유재산을 찾아내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sup>21)</sup>

#### 나. 재조선일본인의 동향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 54명이었던 재조선일본인 집단의 규모는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조선이 식민지로 병합된 이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인 거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1908년에야 10만 명을 넘는 인구는 불과 3년만인 병합 이듬해 20만 명을 넘었고,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한 1930년대 이후에는 매 5년마다 10만 명씩의 인구를 더해간 끝에 1944년에는 71만여 명에 달했다.<sup>22)</sup>

이는 당시 조선 전체인구로 볼 때는 2.8% 정도의 비중에만 해당한다. 절대적으로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수치이다.<sup>23)</sup> 그러나 이들은 주로 식민통치를 위한 관공리, 각종 이권 개발 및 수탈을 목적으로 한 사업·상업·광공업 종사자 등이었다. 농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대개 지주이거나 일본 대토지회사의 직원이었다.<sup>24)</sup> 대부분 농업 종사자였던 조선

21)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95-96쪽.

22)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2쪽. 표 1 '朝鮮在住日本人人口および戸數'

23)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7쪽. 표 5 '朝鮮在住日本人の道別人口'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1944년 조선 총인구는 2591만 명, 일본인을 제외한 조선인 수는 2,520만 명이었다.

24)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쪽. 표 7 '朝鮮在住日本人·朝鮮人·外國人の職業 (1942년 말)' 이 표에 의하면 75만 2천여 명의 일본인 가운데 공무자유업(29만 7천 명, 39.5%)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업(14만 1천 명, 18.7%), 상업(13만 7천 명, 18.2%), 교통업(5만 4천 명, 7.2%)순이었다.

인에 비해 일본인은 권력과 산업의 핵심 전반을 장악하고 독점하였다.

1945년 해방 당시의 일본인 수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1944년보다는 다소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5)</sup> 한반도에서도 전쟁 대비태세가 있었으나 일본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평온한 편이었다.<sup>26)</sup> 남한 지역에서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소련군이 북쪽 국경을 넘어 한반도로 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인들의 동요가 있었다. 다수의 일본인들은 8월 16일부터 이미 각종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상업용 선박 또는 도청 등 관공서나 일본인 단체가 알선하는 선박을 이용했다.<sup>27)</sup>

부산항은 미군이 진주하기 전 일찍부터 일본인들 및 반대로 일본에서 돌아온 조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8월 18일에서 24일 사이 정박해있던 화물선 27척이 귀환자들을 싣고 부산을 떠나 博多항에 입항했다는 기록이 있다.<sup>28)</sup> 8월 20일에는 부관 연락선이었던 興安丸(5,600톤)이 종전 후 처음으로 부산항에 입항해 다음 날 일본인 귀환자들을 싣고 출항했으며 8월 22일에는 두 번째로 德壽丸(2,600톤)이 입항해 24일 출항했다.<sup>29)</sup> 미군이 진주했을 때 부산을 빠져나가는 일본인은 매일 약 4-6,000명 정도였다.<sup>30)</sup>

25) 종전이 다가오는 1944년 이후 일본 전시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재일조선인의 귀국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해방 전에 귀환한 조선인은 약 30만에서 최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45년 본토 공습이 시작됨에 따라 일본인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산 등지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Edward W. Wagner, 1951, 앞의 책, 58쪽.

26)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의 전쟁 준비 체제에 대해서는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 현실』 49, 2003 참고.

27) 이러한 움직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한 것이었다. 최영호, 2003(a), 앞의 논문, 18쪽.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을 위시한 총독부 고위직들도 미군 진주 전 가족을 미리 일본으로 밀항시키려 했다.

28)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22-123쪽.

29) 연합군최고사령부는 8월 24일 오후 6시를 기해 100톤 이상 선박의 항행을 금지했다. 재개된 것은 9월 6일 이후였다.

30) 해방 후 미군 진주시까지 빠져나간 일본인 수를 『주한미군사』 1은 약 160,000명(595쪽)으로 추정했고, 「개인 보고서」는 63,648명(92쪽)이란 숫자를 제시했다.

이처럼 해방 직후 남한에는 권력의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조선총독부는 일찍부터 전세의 불리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갔다. 특히 비상시국에 예금의 인출량이 폭등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 확보에 적극 나섰다. 패전 이후 총독부의 막대한 자금 반출 및 통화 남발은 갓 해방된 남한 경제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했다.<sup>31)</sup> 또 지식인·정치범·사상범을 예비 검속하고 안재홍과 여운형 등 조선인 지도자들과 접촉하면서 치안 유지방법도 모색했다.<sup>32)</sup>

조선총독부는 8월 27일 종전사무처리본부를 설치했다. 총무·절충·정리·보호의 4부(뒤에 급여부 추가) 체제였으며 지방에도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귀환 업무를 담당한 것은 보호부였다.<sup>33)</sup> 보호부는 일본인의 귀환준비, 잔류일본인 단체 조직, 기타 개인과 법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 존속기간을 1년으로 예정, 10개월에 걸쳐 한반도 거주 일본인 65만 명과 만주 및 중국 북부 거주자 130만 명을 귀

31) 정병욱, 2003, 앞의 논문, 131-134쪽. 조선은행 발행고는 1945년 3월 35억 엔에서 8월 15일 49억 엔, 10월 18일에는 88억 엔까지 늘어났다.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81쪽. 눈여겨볼 점은 총독부의 재정대책은 비단 퇴각자금뿐만 아니라 미군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성격의 지출도 있었다는 점이다. 관련해 잘 알려진 것이 1946년 상반기에 남한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김계조사건이다. 총독부에서 종전과 미군의 진주가 압박함에 따라 일본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인 광업가 김계조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해 國際文化社란 댄스홀을 만들게 한 사건으로 이는 일본인들이 수세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방향으로도 종전에 대처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병준, 「해방 후 조선총독부의 전후공작과 김계조 사건」 『이화사학』36, 2008 참고.

32) 단 완만한 전후 처리를 모색하던 총독부와 달리 조선 주둔 일본군은 다소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군은 1만여 명의 특별경찰대를 편성, 각 도에 배치해 경찰력을 유지했고 8월 16일과 18일, 20일 연이어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건국준비위원회 등의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류지아,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8, 2007, 160-161쪽. 이연식은 이 시기 군이 전면에 나서 치안유지의 뜻을 밝히고 동요를 위무하는 일종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74-78쪽.

33) 총무부는 미군에 제출할 자료 작성, 절충부는 통역을 갖추어 총독부와 미군의 절충 역할을 담당, 정리부는 각국의 사무인계 정리와 미군에 민간 기업 및 국유재산 인도를 담당했다.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49쪽.

환시킬 계획을 세우고 2,800여만 원의 예산도 책정했다.<sup>34)</sup>

또한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전주·여수·下関 8개 지역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해 자국민의 귀환을 돕고자 했다. 그러나 패전 후 혼란과 미군정의 진주로 이 기관들은 실제 계획대로 기능할 수는 없었다. 서울과 부산·下関의 안내소만이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보호부는 9월 하순 미군정에 업무를 이관하고 해체되었다. 서울과 부산의 안내소가 남아 귀환업무를 수행했고, 뒤에는 사회화로 흡수되었다.

총독부는 별도로 민간인 중 유력인사를 앞세워 귀환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만들고자 했다. 8월 16일 총독부와 조선군은 귀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한 후 민간인 유력자에게 사태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일 소공동의 경기도상공회에서 京城內地人世話會라는 이름의 민간인 구호단체가 정식 발족했다.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각 지방의 사회회도 잇달아 결성되었다.<sup>35)</sup> 이 단체는 귀환 정보를 제공하고 귀환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일본인들의 귀환 과정 전반을 보조했다.<sup>36)</sup>

34)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150쪽. 참고로 해외 주재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기 기본입장은 본토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현지 잔류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후 연합군총사령부의 송환정책으로 대체되었다.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69-71쪽.

35) 회장은 조선상공경제회 회장이자 경성전기회사 사장이던 호즈미 신로쿠(穂積眞六郎)라는 인물이었다. 노기영, 2006, 앞의 논문, 129-130쪽. 한편 이 단체 결성 시 內地人이라는 식민지시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직 이들이 패전과 조선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다소 안이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해 지방 지부의 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명칭은 日本人世話會로 바뀌었다. 최영호, 2003(a), 앞의 논문, 37쪽.

36) 森田芳夫, 1964, 앞의 책, 315-322쪽. 세 번째 활동범위와 관련, 종전 직후 서울에서는 북한이나 만주로부터 오는 피난민의 수용과 보호를 위해 경성제대 의대생들과 경성일본인외사회 등이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사회회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업부에 의료과를 두었다.

### 3. 1945-46년 미군정의 재조선일본인 송환

#### 가. 미군 관할지역의 일본인 송환

9월 8일 인천을 통해 서울에 진주한 미 24군단은 총독부 기구를 물려받는 형태로 군정청 조직을 정비해나갔다. 군정의 산적한 업무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와 일본, 만주에 걸친 수많은 난민들의 이동을 관리하고 이들을 구호하는 문제였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한해협을 넘나들고 있었다. 아직 본국 정부는 물론 연합군 총사령부의 이렇다 할 구체적인 송환정책이 없는 가운데 미군정은 나름대로 상황에 대처해야 했다.

24군단은 9월 21일, 부산·경남지방에 주둔한 40사단으로 하여금 부산·진해를 통한 일본인 귀환의 책임을 맡겼다(Field Order No.56). 최대의 귀환항인 부산은 사단 산하 160연대가 담당했다. 40사단 사령부와 160연대 일부는 9월 23일, 철도편으로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동했고, 이어 사단 대부분이 26일 현지에 도착했다. 사단이 송환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반도 진주 전 일본군 항복을 대비해 준비했던 작전계획을 변형해 적용해야 했다.<sup>37)</sup>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송환방침을 확립하고, 이러한 정보를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40사단은 송환 당사자인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9월 24일, 부산 일본 주둔군 장교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본군의 규모와 주둔지역 등 중요한 정보를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담당 장교가 적정한 인원의 집결과 승선 등 부산지역 귀환자 수송 업무를 시작했다.

37)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4, Translation: Keijo Nippo 10 Aug.-2 Sept. 1945.

이때부터 40사단은 교통장교 주재로 일일회의를 열어 귀환상황을 점검했다. 여기에는 현지의 선박 및 철도 관계자, 그리고 일본 측에서 세화회와 군의 대표가 참석했다. 일본인들을 하루에 적어도 4천 명 이상은 귀환시킬 것, 배선은 4일 전까지 할당할 것 등 구체적인 송환지침은 현지 전술부대와 귀환 당사자 및 수송·구호 관계자의 협의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각지에서 귀환열차에 탑승할 일본인 수와 열차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지방의 일개 전술부대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이는 군정의 역할이었다. 군정과 원활한 연락관계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부산의 송환계획만으로는 많은 혼선이 불가피했다. 승선 준비와 별도로 열차가 여러 날 도착하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통제되지 않은 귀환자 집단이 부산에 대거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부산의 귀환담당자들이 보고 없이 제대 군인과 그 가족들을 귀환시키는 일도 있었다.<sup>38)</sup> 이는 아래 적듯이, 제대 또는 휴가 군인도 원소속에 복귀시켜 군을 집단 송환한다는 군정 방침에 어긋난 것이었다. 이 같은 초기의 혼란은 군정이 전체 귀환업무를 조율하면서 점차 극복할 수 있었다.<sup>39)</sup>

미군이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장 먼저 송환에 나선 대상은 약 25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이었다.<sup>40)</sup> 군대를 최우선으로 귀환시키고 다음으로 민간인을 귀환시킨다는 것은 연합군총사령부의 지침이기도 했다.<sup>41)</sup> 11월

38) 「계인 보고서」45-46쪽.

39) 부산 현지 귀환회의에 군정에서 파견된 연락장교가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10월 17일부터 였다.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RG 332.

40) 미군의 일본인 송환은 크게 군과 민간인의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은 24군단이 송환과정을 직접 주관했으며, 민간인은 군정청 외사과가 담당했다. 물론 후자의 경우도 24군단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통해 실행했다. 일본군의 귀환에 대해서는 류지아, 2007, 앞의 논문;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조건, 「해방 직후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 실태와 귀환」 『한국학논총』47, 2017 등의 연구를 참고.

41) 미국의 해외 일본인 귀환정책의 근거는 포츠담선언 8조(영토조항)와 9조(일본군의

5일의 지침은 이를 더욱 구체화해 귀환 우선순위를 다음의 다섯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제대 또는 휴가 군인을 포함한 군인 및 군속과 구경찰, 일본 神道の 神官, 광부였다. 둘째는 민간인, 특히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극빈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됐다. 셋째 범주로는 그 외의 민간인이었다. 그러나 정부 및 산업 관련 노동자 등 군정에 필수적이라 생각되는 부류는 제외되었다. 넷째는 위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던 정부 및 산업 관계자들이다. 마지막 범주에는 철도, 통신 관련 근무자가 속했다.<sup>42)</sup>

24군단은 일본군 자체의 철수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그것에 기초해 일본군을 우선 송환했다. 점령군 입장에서도 강력한 무장력을 지닌 군대의 무장해제와 송환은 군정의 안정에 중요했다. 미군은 8월 15일 이후 제대한 군인을 재소집<sup>43)</sup>하는 한편 이미 9월 23일<sup>44)</sup>부터 진행 중이던 서울-부산간 민간인 송환을 중단시키고 군 수송을 위한 특별열차를 편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

무장해제와 귀환조치였다. 종전 후 연합군총사령부의 귀환조치는 기본적으로 군인에 대한 것으로 민간인 귀환은 후순위였다.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92쪽. 연합군총사령부가 귀환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10월 중순부터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그것은 11월로 더욱 늦었다. 황선익, 2012, 앞의 논문, 63쪽.

- 42) 『주한미군사』1, 602-603쪽; 「제인 보고서」넷째 범주의 경우 군정의 허가를 받은 후 귀환시킬 수 있었으며 다섯째 범주의 귀환을 위해서는 군정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반대로 일본의 안정적인 석탄 공급을 위한 SCAP의 요청에 의해 광산 관계자들을 우선 귀환시키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최영호, 2003(b), 앞의 논문, 42쪽.
- 43) 하지는 군 일부를 편의적으로 한반도 현지에서 동원 해제한다는 일본군사령부 요청을 거절하고, 모든 군인은 군인 신분으로 귀환할 것을 지시했다. 단 가족들을 기다리는 경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1월 1일까지 휴가를 허용했다. 「Results of Conference between Lieutenant General Hodge and Lieutenant General Ihara, Chief of Staff, 17th Japanese Army」(1945.10.4) RG 332,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4 of 6).
- 44) 일부 논문에서는 10월 10일부터 군정청에 의한 계획수송이 시작되었다고 하나 미군정의 자료는 자신들 주관 하의 수송 실시를 9월 23일로 기록하고 있다.

9월 26일, 부산에서 군정 감독 하 일본군 3,675명과 민간인 5,341명을 태운 첫 번째 귀환선이 博多로 출항했다. 10월 5일까지 40사단 관할지역의 일본군이 모두 귀환한 데 이어 다른 지방의 일본군도 귀환을 서둘렀다. 각지의 연락부대 또는 가족 동반을 위해 대기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본군은 10월 중순-11월 초까지 한국을 떠났다.<sup>45)</sup>

〈표 1〉 1945년 9-12월 재조선일본군 귀환인원

	9.27-10.28	10.29-11.25	11.26-12.28	계
귀환자(명)	129,051	44,860	2,330	176,241

출전 : 「계인 보고서」(RG 332), 91쪽.

민간인의 귀환은 24군단 보조 하에 미군정이 맡았다. 미군정은 민정관실(Secretariats)에 외사과를 두어 일본인 귀환을 담당하도록 했다. 외사과는 총독부의 종전사무처리본부 보호부와 세화회가 담당하던 귀환업무를 인수했다. 9월 23일에는 보호부가 폐지됨에 따라 업무가 정식으로 이전되었다. 외사과 내에서는 난민계(Displaced Persons Division)가 주무 부서로서 군정청 교통부 및 보건부, 지방 군정부대와 전술부대 등 관련기구와의 협조 하에 귀환업무를 담당했다.<sup>46)</sup>

군정의 매뉴얼에 따르면 외사과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귀환해 온 사람들로부터 해외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둘째 극동 각지에서 돌아오는 한국인 귀환자들의 계획적 수용에 관해 군정

45)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 RG 332.

46) 「계인 보고서」 1쪽. 귀환계획은 애초 군정청 계획국이 담당했으나 업무분장과정을 통해 외사과로 이관되었다. 난민계에는 기획 및 특수계획반·운영반·통계정보반·연락반이 있었고 12월 31일까지 계인 중위를 포함한 14명의 인원(조선인 2명 포함)이 배치되었다. 외사과는 해외 각지 한국인의 귀환업무도 담당했다.



당국과 협의하는 것. 셋째 한국을 출입하는 모든 귀환자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고 관계부서(G-2)에 매일 보고하는 것. 넷째 서울 소재 일본인 귀환자들을 감독하는 것. 세부적으로 열차의 배정을 각지 세화회에 통보하고 열차 화물적재 등. 다섯째 각 도시에서 귀환하는 일본인에 대해 기록하고, 귀환자들의 도착 예정상황을 부산의 연락사무소에 통보하는 것. 여섯째 한국에 잔류하는 일본인에 대한 통계기록을 만드는 것이다.<sup>47)</sup>

난민계의 계인 증위는 외사과장 엔더스(Gordon B. Enders) 소령의 지시에 따라 귀환에 관한 제반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향후 업무방침을 수립했다.<sup>48)</sup> 그에 따르면 군정당국은 첫째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의 송환업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둘째 일본인 송환의 경우 기존단체인 세화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미군정은 세화회를 일본인 귀환에 관한 유일한 민간단체로 공인했다. 셋째 군정의 다른 조직, 즉 교통국·보건국, 그 외에 지방 군정 기관 등과 밀접히 협조하면서 추진하고자 했다.

미군정은 10월 3일 세화회를 통해 일본인은 향후 군정에 협조해 귀환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송계획 발표 시 집결지로 지정된 서울·대전·대구·수원·김천에 집결하여 귀환하며 군정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소지할 것, 치안과 군대의 송환 촉진을 위하여 모든 일본인은 관련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지역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 10월 8일에는 군정법령을 통해 일본인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개별적인 이동을 금지했다.<sup>49)</sup>

이러한 준비를 거쳐 외사과 난민계는 교통부와 협의 하에 본격적인 귀환 수송을 실시하게 되었다. 수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가운데 하

47) USAMGIK,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Seoul, 1946; 최영호, 2003(a), 앞의 논문, 26-27쪽에서 재인용.

48) 「계인 보고서」 3-4쪽.

49) 최영호, 2003(b), 앞의 논문, 43-44쪽.

나는 수송인원의 결정이었다. 이는 세화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일본인들은 각 지역의 세화회와 군정에 등록했으며 귀환을 희망하는 자는 자신이 속한 세화회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지역의 세화회에서는 이들 가운데 우선 귀환대상자를 선발하고 예방 접종을 실시했으며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귀환준비를 진행했다. 각 지역의 군정부대는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남아있는 민간인의 수와 송환해야 할 수를 주기적으로 난민계에 보고했다.

난민계는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 귀환열차의 운행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서울 지역의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제30열차통제반(30th Traffic Control)에 48시간 전에 통고되었다. 또한 열차 시간과 정차장소, 열차 번호 및 수용인원 등은 철도가 지나가는 집결지의 철도부서와 해당 지역 전술부대 및 군정부대에 통지되었다. 귀환자의 지역 내 이동은 해당지역 전술부대가 통제했다.

이처럼 미군정이 귀환과정을 절차화한 것은 우선 귀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이외에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나 기타 재산의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9월 25일 법령 2호「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을 통해 일본으로의 재산 반출을 금지했다. 9월 말 태평양사령부(CINCPAC) 지령 역시 조선에서 일본인이 반출할 수 있는 재산을 엄격히 제한했다.<sup>50)</sup>

이에 따라 귀환 시 일반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현금은 일인당 최대 1,000엔으로 제한되었다. 그런데 40사단이 처음 받았던 지시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군인의 현금 휴대 제한은 더욱 엄격했다. 즉 군인에게 허용된 것은 장교 500엔, 사병 250엔뿐이었다.<sup>51)</sup>

50) 이는 반대로 재일조선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삼부조정위원회의 방침이었다. 이연식, 1999, 앞의 논문, 176쪽.

51)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RG 332.

초과분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미군 재무장교가 인수, 조선은행 특별계좌에 예치했다. 직접 착용하는 시계나 장신구류 등을 제외한 금·은·보석·유가증권·기타 금융증서도 모두 영수증을 발급하고 미군이 인수했다.<sup>52)</sup>

그 외에 일본군에게는 다양한 제한이 가해졌다. 우선 모든 종류의 일본군 깃발은 두고 가야 했다. 단 오직 개인에게만 의미를 지니는 유형은 허용되었다.<sup>53)</sup> 일본군은 휴대할 수 있는 의류 등에도 제한을 받았는데 셔츠와 속옷은 두 벌, 모자와 신발은 하나, 기타 만년필은 한 자루, 연필은 세 자루, 잉크 한 병 등이었다. 단 개인 카메라는 휴대할 수 있었고, 열흘 분량의 의료품이나 식료품도 허용되었다.<sup>54)</sup>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든 귀환 대상자는 장티푸스와 천연두 등의 예방접종을 의무로 했다. 10월 16일부터는 예방접종 후에 증명서를 발급해 이 증명서가 없으면 귀환 열차 탑승을 금지했다. 또한 모든 귀환열차는 그 중 한 량을 병원 칸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세화회의 지원 하에 일본인 의사와 의대생을 동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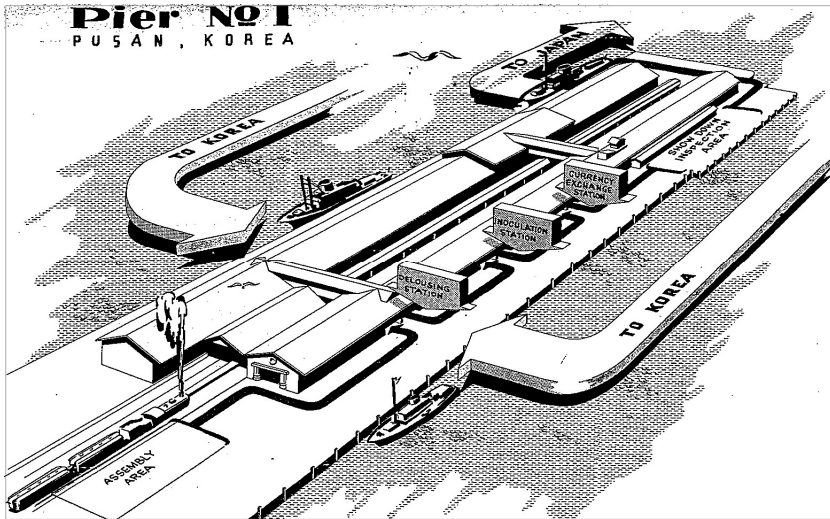
52) 12월에는 규정이 다소 완화되어 일본이나 조선, 대만, 관동 지역 은행이 발행한 통장 지참은 허용되었다. 『주한미군사』1, 605쪽. 한편 법령 2호는 세화회의 운영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원래 세화회는 기부금으로 활동경비를 조달했다. 총독부로부터 1,000만 원, 은행과 회사 등에서 400만 원, 조선군에서 4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의 자금을 운용했으나 법령 2호에 따라 12월에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군정에 압수당했다. 대신 군정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해 귀환자들에게 차용증을 주고 차입금을 받아 운영에 보탬다. 이는 후에 재외공관 차입금 변제문제로 부상하여 재외재산과 함께 귀환자들이 일본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항목이 되기도 했다. 노기영, 2009, 앞의 논문, 132-133쪽.

53) 개인의 무운을 기원하며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주던 千人針과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54) 「Processing of Evacuees both Military and Civilian Prior to movement to Japan」(1945.10.16). 필자는 이 문서를 2010년경,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32에서 확인했으나(국편), 2017년 현재 국편의 웹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소장정보는 다르므로 해당 정보를 병기해둔다. RG 338, USAFIK, Box 8046, The Liaison Detachment of Japanese Army; HQ XXIV Corps, Inter-Staff Routing Slip, Oct. 7, 1945-Feb. 20, 1946.

케 해 열차 내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12월까지 각각 182명과 2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두 대의 병원열차가 부산에 보내졌으며 의료팀 또한 파견돼 일본인 및 조선인 귀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수행했다.<sup>55)</sup>

승선지인 부산항에서 귀환자들은 집결장소(Assembly)를 지나 우선 DDT방역을 거쳤으며(Delousing) 필요할 경우 예방접종을 받았다(Inoculation).<sup>56)</sup> (그림 1) 다음으로 부두에 마련된 임시 환전소에서는 1,000엔 한도에서 조선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Currency Exchange).<sup>57)</sup> 이 과정은 세화회 직원이나 일본군에 의해 수행되었다. 마지막은 소지품 검색이었다(Inspection).



<그림 1> 부산항 귀환부두 구조

출전: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in Korea, 28 Sept. 45 - 15 Nov. 45」 RG 332.

55) 「게인 보고서」31쪽.

56) 10월 1일부터 모든 일본인 귀환자에게 장티푸스와 천연두 예방접종이 실시되었는데, 10월 20일 이후에는 대부분 서울에서 미리 접종함으로써 부산에서의 귀환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 혈청 투여 등의 업무에는 세화회의 도움을 받았다.

57) 부두의 임시 환전소는 10월 20일에 설치되었다.

검색은 30-50명 정도로 구성된 미군 검사반이 직접 개개인의 집을 확인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민간인, 특히 여성에 대한 소지품 검사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다. 미군 보고서는 대다수 귀환자들의 볼품없는 외양 때문에 많은 검사반원이 집 검색을 철저히 할 의욕을 상실했다고 털어놨다.

이 틈을 이용해 특히 민간인들을 통한 대규모 재산반출이 자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도 귀환자들이 여성을 통해 돈을 반출하거나 또는 속옷이나 담뱃갑·비눗갑 등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법 등 각종 밀반출 방법을 청취하고 있었다. 군인들의 경우 검색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민간인들을 통해 재산을 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점차 모든 검색과정이 강화되었다.<sup>58)</sup> 한편 이 같은 부산의 송환과정에서 40사단은 계획된 일정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 부족 등이 원활한 수송절차를 방해했다고 평가했다.<sup>59)</sup>

선박의 운행은 연합군최고사령부 산하 일본 상선을 통제하는 일본선박관리부(SCAJAP) 및 미 해군 7함대의 협조로 실시했다. 또 일본 해군선박 및 상선, 미국의 리버티선(Liberty ship)과 LST(상륙함) 등이 활용되었다. 일본에서 귀환하는 조선인 귀환자의 63%, 부산에서 귀환하는 일본인의 100%가 일본선박관리부 관리 하의 배편으로 귀환했다.<sup>60)</sup>

58) 민간인들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검색했고, 여성들은 한국인 여성들이 검색했다. 자연히 압수되는 물품이 증가했는데, 이에 많은 귀환자들은 현금을 일본에서 환금성을 가진 의류(특히 실크 등 고급소재)나 화장품, 기타 물품으로 바꿔서 귀환하곤 했다. 미군 보고서에는 점잖은 노신사가 지팡이를 왼 손에 8만 엔을 숨겨가려 했던 사례 등이 기록되어 있다.

59) 그 외에 언어 장벽, 시설상의 결함, 수송 노동자들의 미숙련 상태 등을 장해요인으로 지적했다. 미군의 이러한 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한일을 오가는 양국민의 귀환과정은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을 것인 바, 상이한 귀환경험과 그것이 점령군과의 관계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60) 『주한미군사』 1, 615쪽. 승선 정원에 대한 최고사령부의 지침은 리버티선의 경우 3,500명, LST의 경우 1,200명이었지만 귀환희망자의 폭주로 대부분의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승선했다. 리버티선에는 4,500명이 탑승하기도 했으며 LST도 필요할 경우는 1,500명씩 탑승했다.

미군정은 귀환선박의 증편을 두고 연합군최고사령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즉 미군정은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자국의 병원선과 소형선박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사령부 측은 선박의 통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10대의 LST를 증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함대 사령부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일본인 송환에 미 해군 함정을 이용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었다.<sup>61)</sup> 송환을 더 빠르게 실시해 잔류 일본인 수를 가급적 신속히 줄이고자 한 미군정의 입장은 일본 본토 및 선박 통제에 더 치중했던 상부기관과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미군정은 1945년 연말까지 관할지역 내 일본인 대부분을 별 무리 없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난민계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1945년 본국으로 귀환한 일본인의 수는 총 469,764명이었다.<sup>62)</sup>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을 고려한다면 실제 귀환자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난민계는 1946년 1월 9일 현재 남한지역에 19,994명의 일본인이 있으며 그 중 약 76%인 15,174명은 서울 포함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sup>63)</sup>

표 2. 1945년 8-12월 재조선일본인(민간인) 귀환인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귀환자(명)	63,648	105,207	104,981	163,920	32,008	469,764

출전: 「계인 보고서」(RG 332), 92쪽.

61) 『주한미군사』1, 613쪽.

62) 「계인 보고서」92쪽. 월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8월 63,648명, 9월 105,207명, 10월 104,981명, 11월 163,920명, 12월 32,008명

63) 「Report of Repatriation Progress」(1946.1.10)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2, Miscellaneous Over-all Documents of USAMGIK thru Independent Agency Records: Public Services/Social Services(1 of 5). 그 외에 경남 1,950명, 경북 1,320명, 전남 635명, 전북 396명, 충남 386명, 충북 104명, 강원 29명으로 집계했다.

1946년 1월 말 하지(John R. Hodge) 사령관은 군정장관 러취(Archer L. Lerch)를 통해 “군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모든 일본인들은 가능한 모두 송환할 것”을 지시했다. 지침에 따라 외사과는 잔류가 필요한 일본인들을 선정하고 남은 일본인의 송환을 서둘렀다.<sup>64)</sup>

#### 나. 38선을 넘어온 일본인 송환

1946년 1월 15-17일, 도쿄에서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중국전구사령부, 서태평양육군사령부, 5함대 및 7함대 사령부, 주일8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합동 회의가 있었다. 여기서는 한중일 삼국 등 동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귀환문제가 논의되었다. 일본인 귀환에 관해서는 가능한 일본 해군선박과 상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 일본정부는 귀환에 사용할 선박의 운용과 승무원 충원, 수송에 필요한 각종 물자 공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귀환 우선순위는 첫째 군인, 둘째 민간인으로 할 것(단 현지 사령관 재량으로 조정 가능) 등의 큰 원칙을 확인했다.<sup>65)</sup>

한국의 경우 초기의 일본인 귀환은 일단락되었으나 곧 새로운 요소가 발생했다. 북한과 만주 등지에서 38선을 넘어온 일본인 난민의 대규모 유입이 그것이었다. 이에 미군정의 송환업무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북에서 내려오는 난민의 유입은 이미 1945년 말부터 문제가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육로로 넘어왔고 일부는 배를 타고 해로로 내려오기

64) 6월 말까지 잔류 일본인은 400명 수준으로 격감했다. 대부분은 일시 허가를 받아 잔류하고 있거나 또는 부산항만 근로자, 세화회 직원 등 귀환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었다. 『주한미군사』1, 628쪽.

65) 『General Policies Governing Repatriation of Japanese Nationals in Conquered Territory - Annex IV, Agreements Reached at Conference on Repatriation, 15-17 January 1946, Tokyo, Japan』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3 of 6).

도 했다. 특히 북에서 내려온 난민들은 이전의 귀환자들과는 달리 개인 물품을 제대로 소지한 경우가 드문 것은 물론 긴 탈주 과정으로 인해 대부분 극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다. 대규모 인원에게 식량 및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군정으로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sup>66)</sup>

미군정은 송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재류지역에 따라 귀환 루트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즉 평양과 신의주·해주·강계·사리원 등지의 약 10만 명은 철도를 통해 부산까지 수송 후 부산에서 송환, 함흥·원산 등지의 약 8만 명은 원산항을 통해 송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전자는 약 2천 명씩 1-2달, 후자는 약 3천 명씩 수송 시 한 달 이내에 송환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sup>67)</sup> 또 매일 2,500명의 남하 일본인들을 부산으로 수송할 수 있는 정기열차 편성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들 난민의 문제는 비단 미군정이나 연합군총사령부뿐만 아니라 북한을 점령한 소련이 개재된 문제였다. 미군정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정의 부담을 토로했다. 하지는 1945년 12월 말 연합군총사령부에 전문을 보내 소련이 일본인들에게 38선을 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sup>68)</sup> 비슷한 시기 미군정 정치고문 베닝호프가 서울 주재 소련 부영사 콘스탄티노프를 만나 이들의 수송문제를 논의하기도 했고, 1946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

66) 『주한미군사』1, 630쪽. 1946년 1월 초 기준, 미군정은 북한지역의 잔류 일본인은 약 232,000명, 만주지역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했다.「Recap of Repatriates」(1946.1.11)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45, XXIV Corps History thru Korean National Defense(1 of 2)

67) 「Report of Repatriation Progress」(1946.1.10) RG 332. 만주지역의 경우 신경(장춘)·심양·대련 등 남만철도지역 약 120만 명의 난민들은 대련을 통해 일일 5천 명씩 9개월간 송환, 하얼빈·치치하얼 등 북만주지역 약 78만 명은 함북 나진항을 통해 일일 5천 명씩 5-6개월간 송환, 안동(단동)의 약 5만 명은 북한을 거쳐 부산에서 송환하는 것을 구상했다.

68) 『주한미군사』1, 630쪽. 조금 뒤의 일이지만 하지가 소련군사령관 치스차코프에게 직접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sup>69)</sup>

소련 측과 협의를 통해 월경 난민문제를 통제하려던 미군정의 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은 소련군 측이 요구하는 식량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지는 소련이 부족한 쌀을 확보하고, 관할 지역의 일본인을 소개하는 데 미군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 두 개의 목표만을 갖고 있다고 의심했다. 남한도 쌀 부족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 이들을 모두 철도로 부산까지 수송할 경우 남한의 수송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sup>70)</sup>

협상이 결렬된 1946년 2월 이후 월경 난민의 수가 급증했다. 특히 3월에는 한 주에 1천 명을 넘었고, 5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sup>71)</sup> 미군정은 1945년 12월부터 38선을 따라 주요 거점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난민의 유입을 통제했다. 서울을 포함하여 개성·의정부·춘천·주문진 등에는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캠프도 설치했다. 개성과 의정부의 수용인원은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였으며 난민의 증가에 따라 이후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주문진에서는 15개의 대형 군용텐트와 그보다 작은 10개 이상의 텐트로 임시캠프를 대신했다.

각각의 캠프에서는 우선 전염병 등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없을 시에 DDT 살포 및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등 12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후 트럭 등을 활용해 난민들을 우선 서울로 보낸 뒤 열차를 이용해 부산까지 수송했다.<sup>72)</sup> 이와 달리 주문진의 경우는 LST를 이용해

69) 이연식, 2009, 앞의 논문, 112-113쪽.

70) 『주한미군사』1, 630-637쪽.

71) 3월의 유입 난민은 5,281명이었던 데 반해 4월에는 23,36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5월에는 44,011명을 기록했는데 특히 19-26일 구간은 14,526명으로 절정에 달했다. 『주한미군사』1, 644-646쪽.

72) 이들이 서울에 도착하면 세화회에서 인적사항 등록과 난민 증서 발급, 부산까지 귀환절차 안내 등을 맡았다. 『Weekly Report, 3-9 March 1946』(1946.3.11, Displaced Persons Office)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3, Military Government Histories: Kangwon Police thru Repatriation(6 of 7).

곧바로 일본으로 보냈다.<sup>73)</sup>

이와 함께 새롭게 문제가 된 것은 콜레라의 유행이었다. 5월 초 중국과 인도차이나로부터 부산에 입항한 배 세 척에서 시작된 콜레라는 남한 전역 특히 남부지방을 강타했으며 북한까지 번져 문제가 심각해졌다. 5월 28일 연합군총사령부의 지시로 부산의 송환업무는 폐쇄되고 귀환자 수송도 중단되었다.

적체되어 가는 피난민들의 귀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은 귀환항을 다양화할 것을 총사령부에 요구했다. 그 전까지 일본군이 진해나 인천항을 통해 귀환했던 것을 제외하면 민간인의 귀환은 대부분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뢰가 설치되어 있거나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적절한 항구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는 주로 미군 요원들과 화물선 수송항이었다. 콜레라를 계기로 군산과 인천항이 부산을 대신하게 되었다. 피난민들이 몰렸던 주문진에서도 귀환자들을 직접 수송했다.

이 기간 난민들의 수용소 격리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들을 통제-관리하는 업무가 대폭 증가했고, 이는 군정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정이 급했던 미군정은 남한의 콜레라가 통제기에 들어갔다는 판단에 따라 6월 초에 부산항 수송 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콜레라의 확산을 우려한 총사령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총사령부가 하지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 귀환이 재개된 것은 8월 1일부터였다. 이 지점에서 직할지를 달리하는 미군정과 총사령부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난민의 유입도 점차 둔화되었다.<sup>74)</sup>

일본인의 귀환은 1946년 여름까지 군정의 중요한 업무였으나 가을 이후 귀환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다. 북에서 내려오는 난민을 제외하면

73) 『주한미군사』1, 643쪽. 형태나 기능, 운용 면에서 일종의 포로수용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전쟁기의 포로수용소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반대로 다른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74) 『주한미군사』1.

10월 26일에 남아 있는 일본인은 단지 228명뿐이었다.<sup>75)</sup> 이어 다음 두 달간 101명이 더 귀환하여 12월 28일에는 127명만이 남았다. 이중 68명은 군정에 필요한 기술자였고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잔류 중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귀환도 계속되어 1947년 3월에는 40여 명으로 더욱 줄었다. 1946년 12월 13일, 24군단 참모회의에서 작전참모부(G-3)는 일본인 귀환이 거의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고했다.<sup>76)</sup>

#### 4. 맺음말

이상에서 1945-46년 미군정의 재조선일본인 본국 송환업무 전반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일본인 귀환환경이 군정의 송환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짚어보았다.

첫째로 정책 집행주체인 미군정의 시각에서 볼 때 특히 한국 진주 직 후에는 송환업무를 수행하는 데 의지할 마땅한 지침이나 능력이 부족했다. 연합군총사령부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군정 내에서도 서울과 부산간 소통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업무의 혼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수송순위가 확립되고 군의 송환이 일단락된 10월 이후부터 군정 외사과를 중심으로 업무체계가 잡혀갔다고 볼 수 있다. 전 과정에 걸쳐 크고 작은 업무에 귀환 당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도 크게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지침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군정 송환업무상의 장

75) 북에서 내려와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난민은 11월 초 약 200명으로 이들은 곧바로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군정장관 러취는 11월 12일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난민은 곧바로 부산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60시간 내 배에 타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사』 1, 656쪽.

76) 1947년에는 2,659명, 1948년 5월까지 414명의 일본인이 추가로 남한을 거쳐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주한미군사』 1, 656-658쪽.

애가 진주 초기에 국한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조금 더 깊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 본문에서 간략히 언급했지만 이러한 송환과정에서 미군이 송환대상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졌는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둘째로 미군정은 지휘계통상 동아시아 귀환을 총괄하는 연합군총사령부의 하위기관이면서 동시에 한국을 관할하는 점령행정의 주체였다. 같은 지휘계통이더라도 직접적인 관할지역이 다른 만큼 이에 따라 충분히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었다. 주로 귀환자들의 수송문제에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 미군정은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사령부와의 관계에서도 애를 먹었다.

두 번째 논점에 관해 본고는 『주한미군사』 이상으로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명백한 한계이다.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의 여지가 많고, 또 필요하다. 최근 귀환연구의 하나의 흐름은 일국사적 시각을 넘어서려는 것이다. 관점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을 넘어 만주, 중국 관내, 사할린, 동남이쵸도까지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이 동이라는 귀환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귀환의 전체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자 못지않게 이동을 주관-통제하는 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연합군총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와 같이 설령 단일한 지휘계통에 있더라도 각 주체가 처한 서로 다른 상황과 그에 따른 입장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려는 시도가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2017. 7. 6, 심사수정일: 2017. 8. 18,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 재조선일본인, 난민, 귀환, 송환, 미군정

<Abstract>

## The Study on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in Korea and the Respons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1945 to 1946.

Shin, Jae-Joon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responded to the process of returning to Japan from 1945 to 1946. The repatriation of the Japanese in Korea or the Koreans in Japan was a huge social phenomenon in terms of the termination and liberation of colonial period and massive movement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course of filling up the vacancies of these movements and clearing up the remnants in the past colonial period, a prototype of later history of each society was embodied. Especially, this article makes an effort to focus on how the situation of the return of the Japanese influenced the response of the USAMGIK as the subject of 'execution' of repatriation.

First, USAMGIK had insufficient proper manuals or capability with which implement repatriation. There had been communication problems with Seoul and the provinces of USAMGIK itself as well as with GHQ/SCAP. This point caused a confusion in the process of repatriation. Second, USAMGIK was the subordinate body of the GHQ/SCAP, which are in charge of overseas repatriations in East Asia, and at the same time was the subject of occupation administr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Korea. Even the same command system could have different interests depending on which of the direct jurisdictions were different, and this difference in opinion was mainly revealed by the problem of transportation of returnees.

Keywords : Japanese in Korea, Refugee, Repatriation,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